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4.28(금) ~ 2023.05.04(목)

제공일시 2023 05 1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4.28(금) ~ 2023.05.04(목)

제공일시 2023 05 1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영국, 미국 이어 유럽도 '그린 클레임(친환경 주장)' 규칙 협상키로

- 유럽 이사회는 '친환경' '그린' '기후 중립'과 같은 일반적인 그린 클레임(친환경 주장) 금지를 포함, 그린 워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협상키로 한 입장을 채택했음.
- EU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그린 클레임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으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EU기업의 녹색 주장의 절반 이상이 모호하거나 오해가 있고 40%는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음.
- 이에 대해 위원회는 공식 인증체계에 기반을 두거나, 인증마크로 등록되었거나 공공기관에 의해 설립된 지속가능성 라벨만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음.
- 또 소비자들에게 특정 상품에 대한 내구성을 보장하도록 알리기 위해 그래픽 형식을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했음.

(ESGToday, 2023.05.03) Mark Segal 기자

2. 캘리포니아, 2036년까지 디젤트럭 판매종료

-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2036년까지 중형 디젤트럭 판매를 종료하고, 신규 제작되는 화물열차는 2035년까지 배출가스 제로로 하는 운송부문 탈탄소화 규칙 승인을 발표했다.
-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신차, 픽업트럭, SUV 판매를 2035년 이후 무배출차량(전기차)로 채택한데 이어, 2045년까지 운송부문 탄소중립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음.
- 이번 규칙은 대형 굴착 장치, 현지 배송 및 정부 차량을 2035년까지, 쓰레기 트럭은 2039년까지, 슬리퍼 캡 트랙터 및 특수 차량과 같은 기타 모든 트럭은 2042년까지 탈탄소화를 이뤄야하는 내용을 담았음.

(ESGToday, 2023.05.02) Mark Segal 기자

3. 호주, 재생에너지 모범국가 변신...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비중 82%로 높인다

- 호주 에너지 시장 운영자(AEMO)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재생 에너지는 에너지 발전 기록을 깨고 도매 전기 가격을 낮추고 있는 반면, 석탄과 가스 발전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 호주 전체 에너지 중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27.7%이며, 특히 태양광과 풍력이 재생 에너지 발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호주는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전력 비중을 82%로 상향할 계획이며, 이는 재생에너지를 50% 이상 늘리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자랑함.
- 이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총 1억330만 호주달러(약 941억원)의 자금을 투자할 예정임.

(글로벌이코노믹, 2023.05.01) 박정환 기자

1. 대기오염도 배출권 거래한다...감축량만큼 지역 간 주고받기 가능

-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먼지(TSP),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대기오염물질도 사업장이 외부 활동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경우, 그 감축분만큼 추가로 배출량을 할당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 또, 저감시설 설치 계획 등을 고려해 미래의 배출량을 앞당겨 쓸 수 있게 됨.
- 현행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제에서는 현행법상 한 번 할당받은 배출 허용 총량을 변경하기 어려움.
-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오염물질도 배출량과 감축량의 상쇄가 인정되고, 권역에 할당된 총량을 벗어 나지 않는 선에서 지역 간에 여유분을 주고받으며 지역 배출 허용 총량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짐.

(동아일보, 2023.05.02) 김예윤 기자

2. 정부, 자동차 연비·탄소배출 기준 2년 앞당겨 강화한다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잇따라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에 대한 규제를 2년 앞당겨 손질할 방침임.
- 2026년부터 생산되는 자동차의 평균 연비·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임.
- 정부는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도별 자동차의 평균 이산화탄소(CO2) 배출량과 연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정부가 기준 개정을 완료하면 2026년 이후 생산된 자동차부터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 기준이 대 폭 높아지며, 이에 따라 내연기관차 판매도 점차 줄어들 전망임.

(뉴스핌, 2023.05.03) 성소의 기자

3. 30%를 코앞인데...'페플라스틱 재생' 통계도 없다

- 203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에서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30%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기계적 재활용 사업이 지난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입 어려움 겪으며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서울경제가 지적했다.
- 정부는 올해부터 페트 1만톤 이상 생산업체계에 재생원료 3% 사용 의무를 적용키로 했지만, 해당업체는 2곳에 불과함.
- 재활용 가능한 수준의 원료 확보가 어려워, 2019년 플라스틱 폐기량은 2017년 대비 30% 늘었는데, 해외 수입량은 2배 이상 늘었음.
- 2020년 기준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PET 등)은 0.2%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전 세계 재생원료 사용률 6%(2019년)에 한참 뒤처짐

(서울경제, 2023.05.03) 박민주 기자

1. 블랙록, 다임러, 넥스트에라 6억5000만달러 트럭용 전기차 충전네트워크 출시

- 블랙록 얼터너티브는 트럭용 미국 전기차 충전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개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합작회사인 '그린레인'을 공개했음.
- 이번 사업은 다임러트럭, 넥스트에라 등은 재생가능전력 지분투자플랫폼인 블랙록 기후 인프라가 관리하는 펀드를 통해 공개됐음.
- '그린레인'은 2022년초에 조인트벤처 개발계획을 발표했으며, 그린레인은 동부 및 서부해안, 텍사스의 주요 화물 노선에 전기차 및 수소 충전네트워크를 설계, 개발, 운영할 예정임.
- 첫 장소는 캘리포니아 남부로 예정되었음.

(ESGToday, 2023.05.01) Mark Segal 기자

2. 미쓰비시상사, 일본 최대규모 탈탄소펀드 출범

- 미쓰비시(三菱)상사는 미쓰비시UFJ은행 등과 공동으로 일본 내 최대규모의 탈탄소펀드를 세우고, 부양식 해양풍력발전과 재생항공연료(SAF) 등에서 유망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모두 10억 달러를 투자기로 했음.
- 미쓰비시상사는 미쓰비시UFJ은행과 한국 프라이빗에쿼티(PE)펀드의 파빌리온PE와 공동으로 설립된 운용회사를 통해, 조만간 '마루노우치(丸の内) 클라이메이트 테크 그로스 펀드'를 만들 예정임.
- 미쓰비시상사는 수억달러를 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쓰비시중공업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내년 4월까지 10억 달러까지 출자액을 늘릴 계획임.
- 투자액은 1사당 2000만~1억 달러를 상정하고 있으며, 2029년 4월까지 20개사 정도에 출자할 계획임.

(글로벌이코노믹, 2023.05.02) 박경희 기자

3. BMW, 금속 재활용 회사 '사이클릭 머터리얼즈'에 투자

- 독일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 BMW가 고급 금속 재활용 스타트업 '사이클릭 머터리얼즈(Cyclic Materials)'에 투자했음.
- 사이클릭 머터리얼즈는 2021년 캐나다 온타리오에 설립됐으며 희토류, 기타 금속을 재활용하는 공정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임.
- 특히 사이클릭 머터리얼즈는 구리, 알루미늄, 철 등의 금속도 재활용하는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 전기차 시대에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사이클릭 머터리얼즈는 이번 펀딩으로 자본을 3000만 달러 이상으로 늘리는데 성공했으며, 확보한 자금은 추가 기술 개발 등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더구루, 2023.04.30) 홍성일 기자

1. LG전자, RE100 가입 신청...글로벌 고객사 친환경 요구 대응

- LG전자가 글로벌 RE100 이니셔티브 가입을 신청했음. [\(전자신문, 2023.04.30\) 조정형 기자](#)
- LG전자는 최근 RE100 가입 신청절차를 마치고, 주관기관인 더클라이밋그룹에서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음.
- RE100 가입 신청과 검토, 승인까지 최소 3개월에서 5~6개월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오는 6~7월께 가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LG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이사회 결정을 통해 RE100 가입을 결정하고 신청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왔으며,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글로벌 고객사와 기관투자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음.

2. SK E&S, 바스프에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 공급한다

- SK E&S는 바스프와 지난달 18일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 위한 거래협정서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음. [\(연합뉴스, 2023.05.02\) 김기훈 기자](#)
- 이번 계약으로 SK E&S는 2025년부터 20년간 바스프에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며, 바스프는 한국 사업장에서 2025년 기준 필요 전력의 약 16%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임.
- 이를 통해 2045년까지 총 90만에 이르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SK E&S는 약 3기가와트(GW) 이상의 국내외 재생에너지사업을 운영·개발 중이며, 2025년까지 이를 7GW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임.

3. SK지오센트릭, 캐나다 루프와 '그린 플라스틱' 합작법인 설립

- SK지오센트릭이 플라스틱 재활용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과 '플라스틱 리사이클' 공장을 설립함. [\(전자신문, 2023.05.03\) 최호 기자](#)
- 2025년 완공되면, 현재 기술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폴리에스터를 비롯한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고품질 소재를 생산될 예정임.
- SK지오센트릭은 캐나다의 루프와 합작법인 설립 계약(JVA)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음.
- SK지오센트릭과 루프는 51대 49 비율로 지분 투자해 연내 합작법인을 설립, 2025년까지 연 7만톤 규모 해중합 재활용 공장을 건설할 계획임.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4.28(금) ~ 2023.05.04(목)

제공일시 2023 05 1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영국, 플라스틱 포장세 개편 선언에 관련 업계 반발

- 영국 정부는 플라스틱 포장세를 개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화학 재활용 혁신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발표했음.
- 지난 27일(현지 시각), 영국 기업통상부(DBT)는 연례행사에서 영국의 조세 시스템에 대한 일련의 변화에 관해 설명했다. 주요한 변화 중 하나는 플라스틱 포장세의 개혁으로, 관계자는 이를 통해 화학 재활용 혁신을 확대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 지난해 4월 도입된 플라스틱 포장세는 재활용률이 30% 미만인 플라스틱의 포장에는 톤당 200파운드(약 33만 원)의 비율로 적용됨. 포장세는 국내 제조 상품이나 수입 상품 구별 없이 일괄 적용됨.
- 영국 기업통상부는 발표에서 플라스틱 포장에 포함된 화학적 재활용 성분의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매스밸런스 방식(mass balance approach, 물질수지 접근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음.
- ‘매스밸런스 방식’은 특정 포장의 실제 내용물은 재활용할 수 없더라도, 일부 재활용 성분이 사용될 경우 전체 내용물을 재활용된 것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을 의미함. 매스 밸런스 접근법은 코코아, 콩 및 목재와 같은 상품과 같은 지속가능성 인증 체계에서 종종 사용됨.
- 영국 정부는 매스 밸런스 접근법을 취함으로써, 비닐봉지나 포장랩과 같은 유연한 플라스틱(flexible plastic)이나 검정색 봉지와 같은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화학적 재활용에 투자를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 한편 영국 국세청(HMRC)는 4월 초 플라스틱 포장세가 운영 첫 9개월만에 거의 2억800만파운드(약 3500억원)를 징세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운영 첫해에 약 2억7700만파운드(약 4668억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음.
- 이는 처음 영국 국세청이 플라스틱 포장세를 통해 2억3500만 파운드를 징세할 것으로 예상한 것에 비해 약 4000만 파운드(약 668억원) 증가한 액수임.
- 영국 국세청이 예상한 조세액보다 많은 액수에 관해, 업계관계자 및 환경단체는 국세청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음.
-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밸팩(Valpak)의 대표이사 스티브 고프는 “납부된 세금 수준이 정부 추정치를 초과했다는 것은 플라스틱 포장의 순환성을 개선하기 위해 갈 길이 아직 멀다는 경고로 이해해야 한다”고 전했다.
- 그는 “기업들은 현재와 미래의 규제 요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지속할 수 있는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전략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환경단체 시티투씨(CitytoSea)의 정책관리자 스티브 하인드는 “이 세금이 법안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플라스틱 포장세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의 변화를 이끌 가능성이 없다고 경고했다”며 정부는 판매 시점에 플라스틱 세금을 도입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며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비용의 증가를 경험했다”고 비평했음.

(임팩트온, 2023.05.02) 최동훈 기자

- 이어 그는 “정부는 이를 반성하고 현재의 정책이 우리가 직면한 플라스틱 위기를 해결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려야한다. 이제 일회용품에 대한 효과적인 금지와 같은 정책에 의해 뒷받침 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야심차고 구속력 있는 목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플라스틱 플래닛(Plastic Planet)의 공동 설립자 시안 선덜랜드 또한 “대형 플라스틱 회사와 산업계가 명목상의 세금을 단순히 버진 플라스틱(virgin plastic, 플라스틱 신제품)에 대한 사업 비용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플라스틱 세금을 위한 오랜 투쟁이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것에 격분해야 한다”고 비판했음.
- 그는 재무부에 최소한 세 가지의 주요한 세금 개혁을 요구했음. 이는 **▲세율의 두배 상승 ▲제품에 필요한 재활용 성분의 기준을 높여 면세자격을 부여하는 것 ▲기업의 수익률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도입하는 것임.**
- 시안 선덜랜드는 “현 상태로는 세금은 억제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없으며, 개혁이 없다면 플라스틱 세금의 도입을 위해 운동한 우리에게 큰 실망”이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